

평가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청자 반론보도청구권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 재허가와 시청자위원회의 연계,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지원 및 미디어 교육/시청자 단체의 활동 지원을 방송발전기금 용도에 포함한 점, KBS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월 100분 이상) 및 지역채널에 시청자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시청자 평가원에 의한 평가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등 시청자 권리 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이 대체로 다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통합방송법이 미디어 융합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어렵게 준비하고 통과된 이 법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방송위원회가 미디어 융합 규제체제로 기능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있다. 융합미디어의 행정적 관할권이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로 중복되는 등 복잡한 관료주의적 딜레마가 존재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미 방송과 통신의 정책, 규제 기능이 통합되는 추세이므로 우리 나라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과 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이 필요하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철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수용자라는 용어는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적용되는 용어로 사실상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모델에는 맞지 않는 말이다. 디지털 미디어의 수용자는 정보 소비자이면서, 정보 생산자, 정보 배포자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학계에서도 디지털 시대의 정보이용자를 지칭하는 명확한 개념이 없으므로 수용자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최근에 broadcasting(광역 송출, 즉 지상파 방송을 지칭)에 대비되는 broadcatching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것은 미래의 수용자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방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필요한 정보를 낚아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 broadcasting이 즉 정보 배포자 관점에서 나온 개념인 데 비해 broadcatching은 수용자의 관점에서 나온 개념이다.

그렇다면 지상파 방송의 힘에 의해 형성되었던 거대한 대중은 해체되는 것인가? 결국 기술결정론자들의 예측대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사람들은 개인화, 분열화되는 것인가.

아주 가볍게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이용해 왔던 수용자의 변함 없는 심리와 규모의 경제와 같은 매체 시장경제의 저력이 기술의 압력에 효과적으로 맞서 결국 지금과 같은 대중 수용자는 쉽게 사라져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Neumann,1992). 물론 과학기술의 힘은 거셀 것이나 오랫동안 형성된 사람들의 대중매체 이용 습관과 그저 가볍게 즐기고자 하는 욕구와 같은 수용자 심리의 확고부동함,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행사하는 강

력한 힘에 의해 상호작용적, 개인적 디지털 기술이 거대한 수용자 집단을 해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전히 수용자들은 힘을 합해 미디어에 압력단체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수용자운동은 중산층 여성을 중심으로 한 모니터 활동이 주종을 이루었다. 활동의 전문성과 다른 단체와의 연대성이 없는 개별적인 모니터 활동은 문제제기의 수준에 머물 뿐 시청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틀이 형성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수용자들은 좀 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자 권리 찾기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방송법 시행으로 확장된 시청자 권익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철저한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며, 또한 시장의 재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on-line 수용자 활동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상당한 준비와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수용자가 아니라 정보 생산자,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가상공간에서의 수용자 운동),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자로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시민 저널리즘). 가상공간에 대안적 미디어를 만들어 수용자 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디지털 방송의 공공성 문제와 정책적 과제들을 계속적으로 알리고 토론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또한 사이버 스페이스가 진정한 공론장이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규범을 만드는 것도 수용자들의 몫이다. 사이버 스페이스에 사실과 다른, 편파적인 메시지를 감시하는 것, 가상공간에서 즉각적인 반론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한 수용자 운동과제이다.